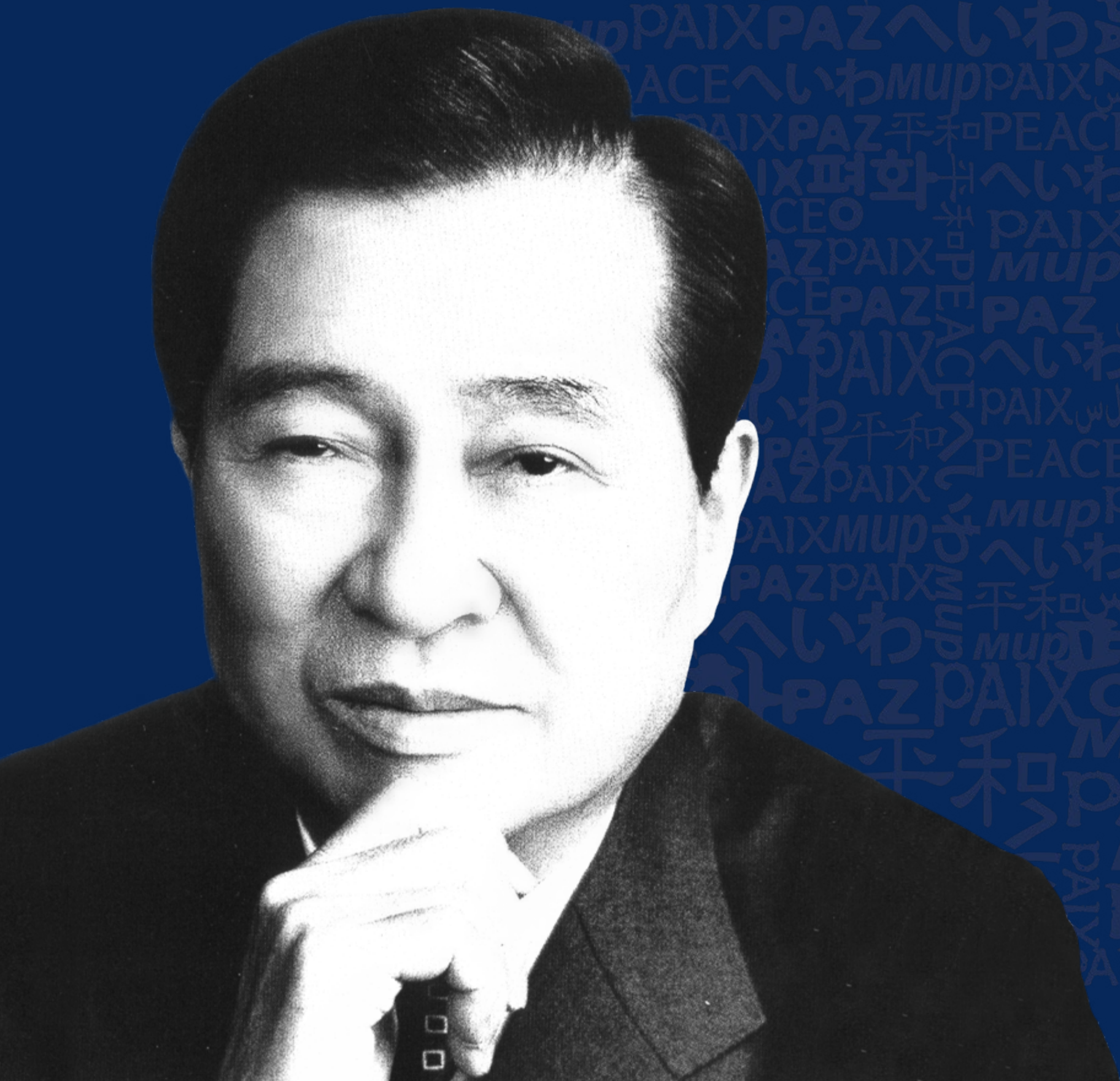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대한민국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대한민국과 세계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했다.

역사와 국민을 믿는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해 헌신하면서, 테러 및 납치살해, 사형선고 등 다섯 번의 죽을 고비를 겪고, 6년간 감옥생활을 하고, 40여 년간 망명, 연금, 감시당하는 삶을 살았지만, 심지어 가족과 친지들까지 감옥에 가고, 고문 당하는 고통을 겪었지만, 단 한 번도 좌절하거나 불의한 세력과 타협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5월,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내란음모로 조작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그 수괴범으로 몰아 사형선고를 하고, 신군부에 협조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1980-5.18 광주항쟁

“

나도 죽는 것이 두렵지만 내가 살기 위해 타협하고, 국민에 의한 민주적 선택이 아닌 방법으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국민과 역사를 배반하는 것이다. 내가 타협하면 나는 역사와 국민에게 영원히 죽고, 내가 신념을 지키고 죽으면 역사와 국민에게 영원히 살 것이다. 나는 역사와 국민을 믿는다.

”



좌)
1980 -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다

우)
1981 - 수인번호 9번. 청주교도소 겨울

대한민국 정부수립 50년 만에 민주적, 수평적 정권교체



김대중 대통령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5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적, 수평적 정권교체를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취임사에서 “국민이 주인 대접을 받고, 주인 역할을 하는 참여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선언했다.

1998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취임식

“

국가는 국민의 주인 됨, 곧 민주적 결정권과 인권 그리고 행복 추구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와 목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에 의한 정부이다. 참여의 정치이다. 참여의 정치란 백성이 주인이 되는 정치, 백성이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정치, 백성이 스스로 신이 나서 건설하고 나라 지키는 정치, 백성이 그 속에서 발전하는 정치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평등과 복지를 향상시키며 세계 각국과 평화로운 협력을 하는 것이다.

”

3대 국정지표

민주주의, 민주적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

5대 국정목표

첫째 민주·인권국가를 건설하고, 정치참여와 확장을 위한 개혁입법을 통해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기업·금융·공공·노사 등 4대개혁을 기반으로 하여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식정보강국을 실현해야 한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연금·고용·산재 등 4대 사회보험 내실화를 비롯해 주택과 교육문제 등에 대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해야 한다.

넷째 망국적인 지역감정과 정치적 대립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대화합과 통합을 이룩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정당명부제 도입 등 정치제도 개혁에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지속적인 화해·협력의 포용정책과 경제협력으로 민족경제공동체 구성을 달성하는 남북한 평화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민주·인권국가
확립



김대중 대통령이 투옥시절, 가족에게 보낸 「옥중서신」

김대중 대통령은 이 국정목표에 따라 민주·인권국가의 법과 제도를 확립했다.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법’, ‘의문사진상조사특별법’, ‘제주 4.3특별법’, ‘광주민주화운동예우에 관한 법률’ (광주 5.18 국립묘지 격상) 등을 제정했다. 또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는 청소년기본법 제정, 장애인인권을 보장하는 한국장애인인권헌장 제정, 여성의 법적·사회적 평등권을 실현하는 양성평등법 등을 제정했다. 그리고 중앙정부인사위원회를 신설해서 성(性), 지역, 학력 등에 차별이 없도록 입현무방(立賢無方)의 민주·인권 인사정책을 실시했다. 또한 언론자유를 위해 국가로부터 독립된 방송위원회 신설, 인권법 제정 및 국가로부터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를 신설했다.

민주적 시장경제 개혁과 IMF 외환위기 극복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주도 계획경제에서 민주적 시장경제로, 해외 차관경제에서 투자경제로, 산업화 경제에서 정보화 과학기술경제로 개혁했다.

민주적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 기업·금융·공공·노사 등 4대개혁을 실시하고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을 철폐하는 '5+3' 재벌개혁을 단행했다. '5'는 경영투명성 제고, 상호보증 채무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기업 설정(업종 전문화), 경영자 책임 강화 등이고, '3'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 부당내부거래 억제, 변칙상속 차단 등이다.



1998 - 미국 증권거래소 방문

국민의 행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이 돈이 없어서 굶주려서도 안 되고, 공부하고 싶은데 학교에 가지 못해서도 안 되고, 아픈데 병원에 가지 못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원칙에서 국민 기본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실시하고, 의료·연금·고용·산재 등 4대 사회보험을 모든 국민에게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의·약 분업을 실시했다.



2000 - 서울 홍제3동 서민촌 '개미마을'을 방문

정보화와 첨단과학기술 강국 실현



2001 - 코엑스(COEX)에서 KAIST 개원 30주년 기념 'See KAIST 2001' 개막행사에 참석



김대중 대통령이 조성한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나로호 발사

정보화강국 실현을 위해 전국에 디지털 초고속통신망을 1년 만에 구축하고 전국 마을과 학교에 인터넷 망을 연결해서 모든 국민이 정보화를 일상생활화 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당신의 손안에”(Government in your palm)라는 슬로건으로, 언제 어디서나 정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자정부를 실현하고, 전자상거래를 일상화 했다.

IT 정보화를 주축으로 BT(생명공학), NT(나노공학), CT(문화산업), ET(환경공학), ST(항공우주산업) 등 「6T 과학기술 산업화」를 촉진해서 대한민국을 추격국가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최첨단 과학기술 국가로 도약 시켰다. 그리고 이런 정보화와 첨단과학기술 산업화와 민주적 시장경제 개혁으로 IMF 외환위기를 2년 만에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10위 강국으로 발전시켰다.

민주적 정치개혁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적 정치개혁으로 국회가 토론과 상호협력의 장이 되어 생산적이고 책임 있는 국회로 활성화 되도록, 여야가 합의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관계법을 제정해서 국회와 관련된 민주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했다. 국회법 개정의 핵심은 상시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국정심의회와 대행정부 통제를 강화하며, 의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망국적인 지역감정과 정치적 대립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대화합과 통합을 이룩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정당명부제 도입 등 정치제도를 개혁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문화정책

김대중 대통령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민주적 문화정책”으로 대한민국을 품격있는 문화국가가 되게 했고, 규제와 간섭의 굴레를 벗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적 발현으로 각 분야의 “한류문화”가 전세계에 파도 치게 되었다.



1998 - 한국방문을 홍보하기 위해 문화예술인들과 CF촬영



2002 - 한·일 월드컵

지구환경오염과 기후위기 해결의 길, 코스모 민주주의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피해

김대중 대통령은 자연의 생명 뿐이에도 생명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코스모 민주주의(Cosmo Democracy)”를 주장했다. 자연은 정복과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은 한 생명의 유기체적인 생명공동체로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철학에 근거해서 “새천년 환경정책”이 수립 되었고, 지구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했다.

화해·협력의 햇볕정책, 한반도 평화 정착

화해와 협력의 “햇볕정책”으로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선포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의 핵심은 “**평화공존 · 평화교류 · 평화통일**” 원칙에 근거해서 남한의 국가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평화·통일 방안 합의, 남북 이산가족 만남의 정례화, 다방면의 경제 및 사회·문화교류협력, 금강산 관광, 경제협력개발공단 조성, 단절되었던 남·북 철도 연결 등을 합의 한 것이다.



2000 -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이 공동선언문은 즉시 이행되었고, 이것을 통해 민족이 하나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구축되었다.

자주적 평화외교 정책

김대중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굳건히 하면서 국제외교도 화해와 평화의 원칙으로 추진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과 화해협력의 외교로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하고, 일본 오부치 수상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미래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를 잊지 말되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했다. 오부치 수상은 처음으로 “일본이 과거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고 말했다.

“

과거를 잊지 말되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

”

위에서부터
1998 -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1998 - 김대중 오부치 한일 미래 파트너십 공동선언
2000 -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2001 -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청와대 오찬



동아시아 평화 지역공동체 추구



2000
ASEM 서울 2000 개최식에서 아시아·유럽 정상들과 김대중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이어서 중국 장쩌민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처음으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정례화하여 동북아에 평화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아세안 +3(한·중·일) 정상회담도 정례화하도록 하고 동아시아 평화·경제·안보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젊은 정치인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비전 그룹”을 창설했다. 2000년 10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ASEM(아시아·유럽국가 정상회의)에서도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 간의 평화협력을 강조했다. 그리고 동티모르 독립,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했다.

노벨평화상 수상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100주년이 되는 2000년 12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노르웨이 노벨평화상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해 헌신했고, 남북 평화를 증진시키고, 일본과 화해 협력하고,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한 것을 높이 평가해서 노벨평화상을 수여한다.”고 수상 사유를 말했다.



2000년 노벨평화상수상

용서와 화해의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은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보복적인 과거사 청산을 하지 않고, 자신을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모든 정적들을 용서하고 화해했다. 용서와 화해의 정신은 국내정치 만이 아니라 대북정책과 대일정책 그리고 국제외교에도 일관되게 이루어졌다.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원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묘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그의 일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1998 - 전직대통령 초청 만찬

“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

내가 기록되고 싶은 역사의 페이지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이룬 사람의 페이지가 아닌,
인생을 어떻게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느냐 하는
사람의 페이지이다.

나는 내 일생이 고난에 찬 일생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불행한 일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내 일생이 참으로 값있는 일생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많이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르게 살려고, 국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려고,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고통 받는 사람들,
세계의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세계의 모든 자유와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해온 일생이었다고
스스로 믿기 때문이다.

김대중

